

코스피	+29.67	2,631.68
코스닥	+12.23	767.35
환율 (원/달러)	-1.0	1,334.90

휘발유(원/리터)	1601.17	▼ (-1.71)
경유(원/리터)	1435.77	▼ (-2.42)
LPG(원/리터)	1017.04	▼ (-0.15)
(전국 평균)		출처=한국석유공사오픈마켓
WTI(달러, 23일)	70.56	▲ (+0.19)

## 모건스탠리 반도체 보고서 ‘재탕’ 논란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유발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Winter Always Laughs Last’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가 지난 2021년 8월 발표된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보고서도 SK하이닉스의 부진을 예상하는 내용이었다.

비교 결과 두 보고서의 문단 구조, 헤드라인, 주요 내용에서 반복된 패턴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최근 이슈인 인공지능(AI)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이슈는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기 복제 수준의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대한 반토막 수준의 목표주가를 제시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최근 보고서는 2021년 보고서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차용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 반도체 시장이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2021년에는 반도체 부족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

2024년 보고서, 2021년 내용과 구조·문구 상당 부분 유사 AI·HBM시장 급성장 불구 분석 미흡…시장 변화 반영 못해 SK하이닉스 목표가 대폭 하향 했지만 분석 근거 부실 지적 “3년 전 과거 틀 고수”…투자 분석의 질적 개선 요구 높아져

쳤다.

그리고 2024년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술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DRAM 시장의 주요 이슈는 DDR4의 공급 과잉과 PC, 스마트폰 등 비-AI 부분의 수요 부진이다. 이러한 최신 동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의 분석 방식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AI와 HBM 메모리에 대한 분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한 이 두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의 시의성과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문장이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서술된 부분이 눈에 띈다.

2021년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계의 시황을 설명하는 부분은 2024년 보고서

에서도 거의 동일한 구조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DRAM 시장의 전망을 제시하는 부분은 문장이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2021년도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의 현재 상황과 특히 집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을 ‘DRAM Market Outlook Worsened Recently’라는 제목을 달아 서술했다.

그리고 2024년 보고서에도 해당 부분은 두 번째 문장까지는 100% 같은 문장이며, 그 이후 문장도 약간의 순서 변화 등은 있지만 내용이 같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AI와 HBM 시장에서의 SK하이닉스의 성과와 전망이 제

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2021년 이후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체가 됐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이런 상황이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시장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서 분석 틀은 거의 수정하지 않고 보고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고서는 HBM 공급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작 HBM의 가장 큰 수혜업체인 SK하이닉스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이에 대해 반도체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2021년 보고서를 단순히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시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AI와 HBM 기술은 메모리 수요를 새롭게 이끌고 있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하지만 모건스탠리 보고서는 기존의 분석 틀을 고수할 뿐 새로운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 중국산 펀다지만…‘배추값 잡기 역부족’



여름철 폭염·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중국산 배추 수입 처방전을 꺼냈지만 다가오는 김장철의 ‘금(金)치대란’ 해소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 배추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배추 물량 투입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입산 배추가 대부분 소비자가 선호하는 B2C 김장용보다는 포장 김치 제조사나 외식업체 B2B 김치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점에 본격적인 김장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오는 10월부터 출하되는 가을 배추 생산량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배추 가격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유통 및 식품업계에 따르면, 배추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위주로 배추 가격의 상승세가 현상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평균 배추 가격(1포기, 할인 미적용)을 비교한 결과 8456원, 할인 적용 시 평균 678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석연휴 직전인 9월 초 가격보다 치솟은 금액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9월 초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6455원으로 지난해 9월 초(5766원)와

비교해 12% 올랐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정부 할인 정책에 동참해 포기당 7000~9000원대 가격에 배추를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전통시장에서 포기당 2만원을 웃돌고 있어 소비자에게 시세 혼동마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배추 가격 상승세에 농민축산식품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에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이란 긴급 처방을 꺼내들었다. 일단 이달 27일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톤(t)을 들여오고, 가을배추 작황 여부에 따라 추가수입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중국산 배추 수입에 따른 소비자 체감불가를 낮추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배추의 물량 수요처가 가정용이 아닌 외식·식자재 업체, 김치 제조사의 수요에 치중돼 있어 과연 일반 소비시장에서 얼마만큼 가격억제 효과가 이어질 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62톤, 2011년 1811톤, 2012년 659톤, 2022년 1507톤 씩 중국산 배추를 국내 반입했다. 가정용으로 유통된 적은 없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번 중국산 물량도 업체용 소비로 풀리 대진 가정수요 충족을 위해 산지유통인과 농협이 보유한 물량을 조기 공급하도록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하나·서예은 기자 inahohc@ekn.kr



LG전자, 글로벌 해양 생태계 보호 앞장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바다사자'를 주제로 한 세 번째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개된 캠페인 영상.

## 아파트 월세 500만원 시대…이사철 앞두고 수요자 몰린다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근 월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반면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월세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p) 오른 116.1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은 때 아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라지던스' 전용 84㎡는 지난 7일 보증금 3억원·월세 48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전세사기 영향 등 '월세 선호' 강해 개포동 전용 84㎡ 480만원에 거래 매물도 줄며 당분간 지속 상승 전망

5월에는 같은 보증금과 월세 32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에 비하면 월세가 50%나 올랐다.

이 같은 월세 가격 급증은 우선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세가격은 0.12%오르며 7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또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월세로 몰

리고 있다. 월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을 초과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423건으로 집계되며 매매 거래량인 857건을 크게 앞질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5554건으로 지난 3년 동안 월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2023년 1월(3만1313건) 대비 무려 50.4% 감소했다. 월세가 인기를 끌면서 계약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크게 증가하자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난달 주담대 금리 인

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약 1%p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월세 가격 급증과 매물 감소가 겹치며, 향후 주택 임대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서진형 공인대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지금과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임대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를 피해 월세로 몰렸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 월세로 몰려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에 비해 월세 수요가 월등히 많아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5@ekn.kr

## K-밸류업 지수 공개…공시 기업은 ‘소수’

100종목 구성…“중장기적 관점용”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과 선정기준을 공개하면서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정식으로 공시한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중장기적 조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전산테스트가 완료되는 오는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기준시점은 올해 1월 2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년 초일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했다. 기준지수는 1000포인트다. 다만, 지수 상품화 지원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5년치에 대해 소급지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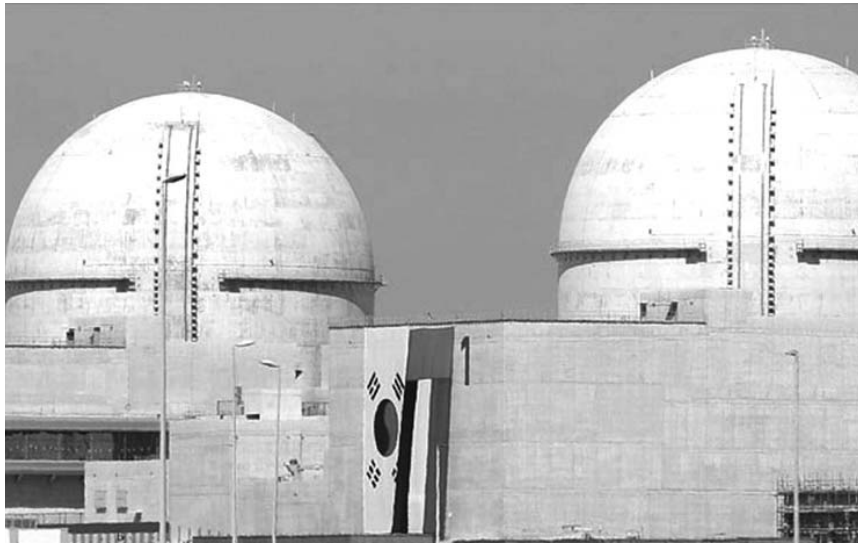
지수는 100종목으로 구성됐다. 정보기술(24개), 산업재(20개), 헬스케어(12개), 자유소비재(11개), 금융·부동산(10개), 소재(9개), 필수 소비재(8개), 커뮤니케이션(5개), 에너지(1개)로 전체 산업군의 대표종목을 고르게 편입했다.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으로 개별종목의 지수내 비중을 15%로 제한한다. 시장 분포는 유가증권시장(67개)과 코스닥

(33개) 종목수 비중이 약 7대 3 비율로 구성돼 시장간 종목 배분이 적절하게 반영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종목은 '5단계 스크리닝'을 통한 종목 선별했다. 시장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해 시가총액 상위 400위 종목을 뽑았다. 수익성 부분에서는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 아닌 종목을 구성했다. 또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종목을, 시장평가분 야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 효율성도 확보하기 위해 시장대표성과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산업군별 ROE 순위비율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했다.

거래소는 30일부터 1초 단위로 실시간 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선물은 11월 중 상장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는 지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평균 종목교체율(정기변경시 교체종목수를 구성종목수로 나눈 비율)을 21.2%, 턴오버 비율(정기변경시 교체종목의 시가총액을 전체 구성종목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14.5%로 적정 수준의 종목 교체할 계획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 원전 저가 수주?...“체코, 위험무릅쓰고 저가 계약 이유 없어”



UAE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프랑스 언론 저가수주 의혹 제기, 체코 언론 김건희 여사 모독적 보도 야당·일부 언론 인용...尹 대통령 "사활 건 기업·정부 돕길 못할 망정" 세계원자력協, kW당 원전 단가 韓 3571달러·美 5833달러·佛 7931달러	
오해	진실
덤핑, 저가 수주	프랑스 측의 일방적 주장 입증 가격 공식 확인 불가능 체코 측이 총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5개월 이상 검토한 결과 부실공사 걱정 하면서 저가입찰자를 선택할 이유 없음
김건희 여사 체코 보도	'사기꾼'이라는 표현 사용했다가 추후 삭제 조치



프랑스 EDF가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된 이후 과연 본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덤핑(저가수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 논란 등 오해와 진실이 여전한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북돋아주고자 지난주 직접 체코를 다녀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주계약자가 될 것이라는 확실보다는 의심의 여린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된 이후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했다는 덤핑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체코 유력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성 기사 나오면서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계약이 성사될 경우 '24조원'(4000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도 한국이 약속한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와 현지 노동력 우선 고용, 추가 금융지원 조건 등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갑인 원전 수주 시장 특성상 실제 한수원에 돌아올 이익

은 크지 않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종은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우리보다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이 훨씬 많은 프랑스보다 건설 단가가 절반 이상 낮고 중국보다도 단가가 낮다는 것은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는 걸로 보는 게 맞다”며 “현재 체코 정부가 60억유로(약 9조원)의 원전 사업비를 결정했을 뿐 남은 비용 조달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이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애초 한수원에 예상한 계약금액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원전 업계에서는 프랑스 언론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약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원전 수주 당시 가격면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우위를 점한 바 있다.

노동성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 소통센터장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프랑스는 공사비로 kW당 3800달러, 우리나라는 3200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바라카 원전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격으로 수주한 바 있듯이 덤핑론은 프랑스 측의 면피를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EDU II)를 포함해 총 206명의 전문가들이 총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5개월 이상 검토한 결과”라며 “팀코리아가 손해에 예상되는 덤핑 입찰을 할 이유가 없고 체코도 부실공사 걱정을 하면서 저가입찰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로 미뤄 보면 팀코리아는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은 글로벌 에너지정책의 화두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 비중을 늘리려는 이유”라며 “체코원전 수주는 우리 원전 산업계가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다. 덤핑입찰 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언론의 마타도어식 덤핑론 제기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한테 수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한 원전 수출 전문가는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권이며 원전의 유럽 맹주라 할 수 있는 프랑스가 우리와의 강력 한 경쟁 상대였고 프랑스도 체코원전 수주를 당연시 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되자 프랑스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프랑스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손해를 가격이라며 덤핑론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약속된 예산으로 적기에 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본계약 전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체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7월 2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한 가격이 덤핑이 아닌 공정한 가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 논란에 대해 “정부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말이 있다. 국의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험담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양국의 협력 강화를 다짐한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기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 팀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부터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소화했을 당시 체코 현지 언론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라

며 이를 인용한 국내 언론에 아쉬움을 보였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체코의 대표적 인 대중지로 알려진 ‘블레스크’는 김 여사와 관련한 탈세와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각종 의혹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김 여사를 가리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추후 삭제 조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한 23일 브리핑에서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표현이 삭제 조치된 것을 다시 한번 내신(內信)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영부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외신 보도를 굳이 내신에서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중동에 이어 원전 부흥의 중심지인 유럽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과 건설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원전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안방인 유럽에서 유력한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꺾고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K-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 금리인하기 투자자들 ‘고금리 적금’ 눈치작전

신한銀, 연제저적금 50만좌 소진 낮은 우대금리...7.7% 이자 입소문 KB스타적금 최고 연 8% 금리 ‘특판 실종’ 저축은행, 금리 소폭 ↑ 연말 예적금 수신잔고 유지 필요성

평균금리		금리 조회일: 2024.09.24	
정기예금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3.20%	3.68%	3.12%	3.10%

판매했지만, 이 역시 빠르게 물량이 소진됐다.

연제저적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기본이자율 연 4.2%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 3.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7%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통상 고금리 상품의 경우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을 내거는 것과 달리 해당 적금은 우대금리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상품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 이자율로 이자율을 적용해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쉽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10만좌 한정으로 선보인 ‘KB스타적금’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B국민은행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에 가입한 고객은 기본이율 연 2.0%에 최고 연 6.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금리 연 8.0%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예치시 중도에 해지해도 기본이율과 이미 확정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국민은행 측은 “명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판매량이 상당히 고객들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68%다. 8월 1일(3.65%)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덧붙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 4.1%의 금리를 제공해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다. 대한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로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은 계속된 적자로 인해 고금리 특판 상품 출시는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신 잔고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연말 예적금 만기 도래에 대비하고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를 소폭 올리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7월 말 현재 수신 잔액은 99조9128억원으로 100조원을 하회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11월(98조6843억원)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여신잔액도 7월 96조8055억원으로 3개월 연속 100조원대를 밑돌았다. 저축은행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고금리 상품을 늘리면서 이자비용이 급증하자 작년 말부터 수신금리를 낮추고, 대출상품을 보수적으로 취급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아시아나 정비사 30여명, ASML로 이직...왜?

현행 항공기, 전자 장비 다수 장착...“EUV 다루는 방식과 80% 일치” ASML 코리아 CS 엔지니어 초봉 1억...“탈 정비사 행렬 가속도 예상”

국내 항공기 정비사들이 반도체 업계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최근 3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에서 ASML 코리아로 30여명의 엔지니어가 대거 옮겨간 것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업계의 연봉이나 처우 수준이 항공업계 대비 월등히 높고, 관련 장비들의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항공 정비사들의 이직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국내 항공사 소속 정비사들 중 상당수가 ASML 코리아를 위시한 반도체 업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직하는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전인 2021~2022년 사이이다. 현재는 반도체 업계의 채용 인원이 줄어 이직 열풍이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항공업계에서 반도체업계로 인력 유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잉 787·737-800·737-900이나 에어버스 A330·A321 네오 등 현행 항공기들은 과거와는 달리 다량의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EUV(Extra Ultra Violet)는 노광(포토)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장비다. 항공 정비사들은 자신들의 본업과 EUV를 다루는 방식이 80% 가량 일치해 매뉴얼을 참고하면 금세 반



아시아나항공 정비사들이 격납고에서 작업하는 모습.

도체 장비에 관한 업무를 익힐 수 있다고 말한다.

실례로 노정훈 삼성전자 DS 부문 프로는 항공 기관·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 2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항공 정비를 배운 덕분에 재료의 특성과 유체역학적인 부분과 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공구들의 이름과 특징, 사용법에 대해 익숙했다”며 “그래서 자동차나 각종 기계, 장비를 배우는데 습득이 빠르고 작동 원리나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빨라졌다”고 했다.

통상 항공 정비사들은 운문에 기쁨을 묻혀가며 작업을 해나간다. 그러나 운에 민감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클린 룸에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

에 비교적 쾌적하다는 점도 이직 러시의 이유 중 일부분을 차지한다.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A씨는 “EUV와 에어버스 항공기의 전자 장비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이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ASML 코리아가 항공 정비사들을 선호해 회사 동료 30여명이 줄지어 옮겨갔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기준 항공 정비사 대비 ASML 코리아 CS 엔지니어의 급여가 2000만~3000만원 가량 많고, 초봉은 1억원으로 처우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3일 근무 후 3일 휴식해 근로·복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 근로자들은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 체제에 묶여 수년째 인건비가 동결됐고, 8년째 추가 채용도 이뤄지지 않아 항공 정비사 정원 1600여명 중 300~400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게 현업자의 설명이다.

A씨는 “반도체 업계가 선호하는 항공 정비사의 조건으로는 40세 이하 대리·과장급인 젊은 인력이고, 떠난 사람들 중 돌아온 경우는 단 한 명도 본 적 없다”며 “고령 근로자들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국내 항공 정비사들의 반도체 업계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EUV를 지속적으로 들여올 계획인 만큼 이에 따라 유지·보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사다. 박규민 기자 kevinpark@ekn.kr

# 79개사 중 4개사만 이행... '집중투표제 포비아' 여전

대주주 경영권 방어 불리해 꺼려...포스코홀딩스·한화오션, 정부 영향 도입 SK그룹 계열사 2곳 채택 눈길...소액주주 지분을 더 높아 불리하지 않아

## 10대그룹 지배구조 보고서 (9)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제계에서는 '포비아(공포)'와 유사한 수준의 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SK텔레콤과 SK스퀘어, 포스코홀딩스, 한화오션 등 단 4곳만 도입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이사회 중심의 경영 기조가 점차 강화되면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도 이사회 의장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24일 제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사 거의 대부분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동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한 10대 그룹 계열 79개사 중 4개만이 지난해 말 기준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고 답변했다. 이행률을 따지면 5.05%에 불과했다. 핵심지표 중 이행률 한 자릿수로 나타난 것은 집중투표제가 유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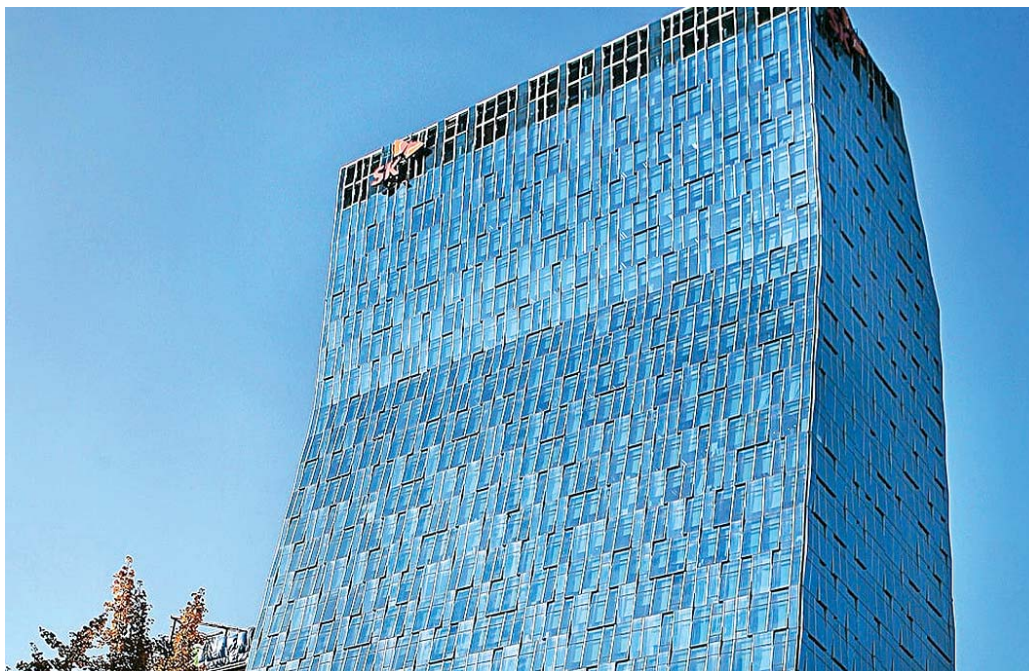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주 등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올해부터는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에 한해 공개가 의무화됐다. 또한 정부는 지배구조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15대 핵심지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는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대주주에 불리한 점이 많은 탓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이에 소수의 지분을 가진 주주도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실제로 영국계 헤지펀드 칼 아이칸 연합이 2006년 집중투표제를 통해 KT&G 이사회 이사 1인을 교체하고 경영권에 간섭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는 등 권장하고 있음에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많지 않다. 실제 집중투표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제를 채택한 기업을 살펴보면 대우건설,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등 정부의 입김이 강한 기업이 전부다.

10대 그룹 중에서 국민연금(지분율 6.38%)이 최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와 과거 오랜 기간 산업은행의 관리 체계를 경험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SK그룹의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정부 이외에 최대주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를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계에서는 이들의 사업이 안정적인 편이었고, 지배구조도 집중투표제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산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사업적 부침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스퀘어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11번가 등 전

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애초에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집중투표제가 불리하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다. SK㈜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텔레콤과 SK스퀘어 지분율은 각각 30.03%와 30.06%에 불과하다. 이는 양사의 소액주주 지분을 합계인 47.7%와 35.47%보다 낮은 수준이다.

SK㈜가 보유한 SK텔레콤·스퀘어의 지분율은 적은 편이지만 우호세력인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이 각각 회사의 지분율을 13~17%가량 보유해 경영에 안정성을 더해주는 구도다. 대주주가 4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독자 경영을 하는 국내 다른 대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집중투표제 채택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이행률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제시'와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 선임'도 각각 22.78%와 26.58%로 매우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로 나타났으나 이행률이 55.7%로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제계 관계자는 "대주주 입장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큰 변수가 없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이행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 '5% 성장' 목표 적신호에 '화들짝'...중국도 돈 풀다

### "지준율·정책금리·LPR 다 내려 경기 부양" (대출우대금리)

#### 중 금융당국 수장 3인 이례적 합동회견

지준율 0.5%p 낮춰 189조원 유동성 공급 추가 인하 여지도...당국 강력한 의지 보여

경기 부진에 직면한 중국이 조만간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내리는 것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정책금리,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까지 모두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서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판공성 중국인민은행장은 24일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 행장은 이어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지준율을 0.25~0.5%p 추가로 인하할 여지를 남겼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낮췄고, 올해 춘제(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더 인하했다. 잇따른 지준율 인하로 현재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9% 수준이다.

장기 침체를 이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도 발표됐다.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7일물 금리를 현재 1.7%에서 1.5%로 0.2%p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 행장은 "이번 정책금리 조정 이후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가 약 3%p 낮아지고, LPR와 예금 금리 등도 이에 따라 0.2~0.25%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시장의 호가금리와 예금금리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고,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시장 예상을 깨고 5년물 LPR 금리를 연 3.85%, 1년물을 연 3.35%로 동결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1년물 LPR은 일반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미상환 주택 대출 금리를 주택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과 동일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판 행장은 상업은행이 미상환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주택 대출 금리 근처로 낮추도록 유도하



판공성 중국인민은행장

면 평균 인하 폭이 대략 0.5%p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2주택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춰 첫 주택과 2주택의 계약금 비율을 맞추겠다고도 했다.

인민은행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신설했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판 행장은 조건에 부합하는 증권·기금·보험사가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자금 확보 및 주식 보유 능력을 높이는 제도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자기 주식 매입과 보유량 증대를 위한 특별재대출을 신설해 은행이 상장사와 주요 주주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판 행장 외에도 리원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중국 3개 금융당국 수장이 이례적으로 모두 참석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8월 월가에서는 올해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이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전망치를 각각 4.7%, 4.6%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릭 주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7% 성장이 기본 전망치였는데 이번에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성장률이 5%에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 깨끗한 에너지로 - 세상을 따뜻하게!

푸른 하늘 아래 함께 만드는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온기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1등급 전차 타기

# 연회비 10만원 이상 ‘쑥’...카드사, 혜택 늘리고 고객 잡기 ‘혈안’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44종 연회비 11만3225원, 작년비 63% 증가  
“연회비 상응하는 수준 바우처 제공하기 때문에 손해 아니다” 인식  
10만~30만원대 카드 인기...현대·하나카드 등 여행 관련 혜택 집중  
“프리미엄 카드 상반기 실적에 많은 영향·상품 개발 경쟁 치열해질 듯”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본인 수익성 확대 목적에 더해 여행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 수요를 타깃하며 프리미엄카드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2024년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된 신용카드 44종의 연회비 평균은 11만3225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6만9583원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6% 증가했다. 평균 연회비는 지난해 하반기 감소했다가 올 상반기 들어 1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카드가 다수 출시 및 리뉴얼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연회비는 기본적으로 카드 발급과 배

송,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회비는 1만~3만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프리미엄이나 플래티늄 등 이름이 높은 상품들은 1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받는다.

이전까지 연회비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카드사에 내는 비용이나 일종의 수수료’라는 인식이 강해 연회비가 낮은 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현재는 10만원 이상 연회비의 저가형 프리미엄카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낸 액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진 데다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일반적인 혜택 외의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에 10~30만원대 연회비로 프리미엄 고객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된 신용카드 44종의 연회비 평균은 11만3225원이다.

이 된다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등 심리적인 변화도 영향 중 하나로 해석된다. 혜택이 미미한 일반카드보다 차라리 조금 더 높은 연회비를 지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쪽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업계로부터 주목받는 상품군은 연회비 10만~30만원대 카드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상반기 연회비 저가형 프리미엄카드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상반기 중 연회비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5종 이상 출시했다.

아멕스 현대카드 시리즈의 리뉴얼을 비롯해 단종됐던 MX 블랙(Black) 재출시,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 서밋(Summit) 등을 선보이며 상품군을 늘렸다. 하나카드도 지난 2월 내놓은 ‘제이드 클래식’이 출시 후 120일 만에 4만매를 돌파하자 6월 제이드 프라임, 제이드 퍼스트, 제이드 퍼스트 샌텀을 추가로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올해 상반기 프리미엄 브랜드 ‘제이드(JADE)’ 론칭 후 크게 흥행하며 프리미엄카드로의 뉴노멀을 이

끌기도 했다. 카드고릴라 집계에 따르면 제이드 클래식은 지난달 연회비 10만원 이상 프리미엄카드 순위권에서 1위를 기록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여행 카테고리와의 관련 관심과 지출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이같은 수요를 타깃해 집중적으로 해당 혜택을 담아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상반기 ‘연회비 10만원 이상 프리미엄카드’ 집계 요인 30개 카드 상품을 살펴보면 제이드 클래식의 경우 바우처 최대 10만원에 전세계 공항라운지 연 3회 무료 이용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현대카드 서밋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 중이며 3위인 신한카드 더 베스트-F 상품의 경우 사용금액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해준다.

이외에 현대카드 ‘더그린 에디션2’도 공항라운지 이용 혜택을, KB국민카드의 ‘BeV V’카드도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해외 공항라운지 무료이용 서

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프리미엄카드에서 여행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카드가 6월 새로 발매한 상품에도 인천국제공항 무료 발렛 파킹,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렛 파킹, 호텔 조식과 얼리체크인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카드사들의 서비스 축소 전략에 따라 알짜카드 출시가 줄어들어 중단되자 경쟁축이 저가형 프리미엄카드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카드사들은 저가형 프리미엄카드 수요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고 해당 시장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이 집중되면서 조달비용 인상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악화된 실적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프리미엄 카드가 실제로 상반기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줬다”며 “우량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기에 라인업 다양화와 리뉴얼 등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Sh수협銀 차기 행장 신학기 부행장 내정

신 후보자, 2020년부터 수협銀 전략·재무 총괄 수석부행장 맡아



신학기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후보.

Sh수협은행 차기 행장에 신학기 수석 부행장이 내정됐다. 수협은행은 24일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신학기 수석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후보자는 추후 은행과 중앙회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이 확정되면 행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이다.

신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동아대를 졸업하고,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인계동지점장, 리스크관리

부장, 심사부장, 전략기획부장, 남부광역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수협은행의 전략과 재무를 총괄하는 수석 부행장을 맡고 있다.

수협은행추천위원회의 “신 후보자는 수협은행 내에서 영업과 기획, 전략과 재무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성과를 쌓아온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며 “후보자 경험과 능력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모범관행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경영 승계절차에 착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은행의 비전 제시와 전문성, 경영 능력과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정밀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JB금융 “주주환원을 50%, 자사주 소각 40%”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ROE 15% 등 2026년까지 실행방안 제시

JB금융그룹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장기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주주환원을 50%, 총 주주환원 금액 중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40%를 제시했다.

JB금융은 24일 그룹의 수익성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또 JB금융은 2026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3개년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안정적인 보통주자본비용(CET1)을 기반으로 ROE 13% 이상을 유지하고, 주주환원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 45%를 달성하는 중기 계획이다. 또 배당성향 28%를 초과하는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JB금융은 이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B금융은 지방금융그룹 중 최초로 분기배당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보통주 자본비용(CET1) 12% 이상을 안정적인



JB금융주.

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했다. JB금융은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JB금융은 오는 30일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해를 돕고자 ‘JBFG’s Capital Markets Day’를 개최하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에너지 경제의 힘 삶의 근원

## 김소영 “금리인하기,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 투입 경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장전문가들과 금융현안 회의 “美 Fed 금리 인하 기점으로 전세계 금리 인하 방향성 확인” “금리 인하기 생산적인 부문 자금투입 확대하는 것이 중요”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진, 과도한 자금 투입 억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 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부동산 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이 모두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부위원장은 금리 인하기 생산

적인 부문으로 자금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부위원장은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부위원장은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

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외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속적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경제 전반의 매크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 강화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유리 기자 ys106@ekn.kr

## 은행 점포 5년간 651곳 ↓...서울 255곳 감소

경기 117곳...비수도권 대구 55곳, 부산 48곳, 경남 32곳 경북 23곳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가 5년간 651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가운데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구였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부산진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20년 4488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37곳으로 651곳 감소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점포 수는 각각 255곳, 117곳 줄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전국 은행 점포

의 50.8%가 서울(32.4%), 경기(18.5%)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구(55곳), 부산(48곳), 경남(32곳), 경북(23곳), 인천(20곳), 전남(18곳) 순으로 은행 점포가 줄었다.

은행권이 점포를 줄이면서 적자 점포 비중은 감소했다.

4대 시중은행은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중이 6.2%였지만, 5년간 3303개 점포 가운데 513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율이 3.1%로 낮아졌다.

지방은행은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



은행 ATM기.

율이 48%였지만, 5년간 911개 점포 가운데 111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중이 17.6%로 떨어졌다.

이 중 부산은행의 경우 적자 점포 비중이 2020년 72%에서 16.7%로 낮아졌고, 경남은행도 71.2%에서 51.6%로 개선됐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은행까지 대규모 점포 정리를 단행하면서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실제 파악 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 “금투세 시행” vs “증시 부양이 우선”...야당 ‘침에 대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미 제도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된 만큼 이번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투세 시행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 겸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이 토론회 준비위원장 겸 사회를 맡았고 시행팀에서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의 의원은 “현재 우리 증시는 불법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를 유예할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해외 증시로의 자금 이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

## “이미 두 차례 유예...시행할 때” vs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2시간 넘게 갑론을박 토론회...의견수렴 후 향후 당내 최종 의견 확정 예정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호 제도 마련이 시행 조건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지난해보다 악화됐고 투자자보호 제도는 갖춰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5년 전보다 약 10배 증가하는 등 해외 증시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 민주당이 백류업 상법 개정을 주도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우리 시장에 증시 부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준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세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인도의 경우에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증시를 충분히 부양한 이

후 시장에 신뢰를 구축한 다음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인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의롭기만 할 뿐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인 우리는 정의 구현 자리가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투세의 부작용을 언급하는 합리적 지적에 대해 과잉이나 과도한 공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주장

하는 시행팀 의원들은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라며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과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지난해에 손실을 봤더라도 올해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구조로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주식·채권·펀드 등 상품별로 다르게 과세하고 있어 복잡하고 후진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복잡해져서 투자 결정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기상조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 정체성에 금투세 유예가 부합하지 않고 싶다”며

“이미 여야합의를 마치고 시행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유예한다면 다 된 밥을 놓치는 꼴로 앞으로 영영 시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꼬려했다.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작전세력들로 인한 추가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금투세로 바꾸지 않으면 작전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를 치는 등 시장 불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시행팀에서는 금투세가 추가조작 방지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논리의 비약이 과도하다”며 “모든 거래 자료는 한국거래소나 예약원 등에 이상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되는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소득 자료로 추가 조적이 어떻게 예방이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행팀과 유예팀은 금투세를 당장 시행할지 자본시장 선진화 이후 유예할지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MSCI 등 모든 평가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배구조로 상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을 우선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 다음 과세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예팀은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유예한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도입 둘 다 놓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남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선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우려하는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상황을 불분명하고 덮어놓고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안락하게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7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토론회 직전에는 토론 회장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 대표가 ‘금투세 폐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면서 총회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김기영 기자 gjyong@ekn.kr

## 최악은 피했지만...중소형 증권사 ‘PF 우려’ 여전

나신평,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분석 부동산 위험 노출액 3.4조원 수준 대형사, 부실 심화 가능성 낮지만 “중소 증권사 모니터링 강화” 지적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당초 예상된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볼 때 증권사의 부실이 타산업으로 확산돼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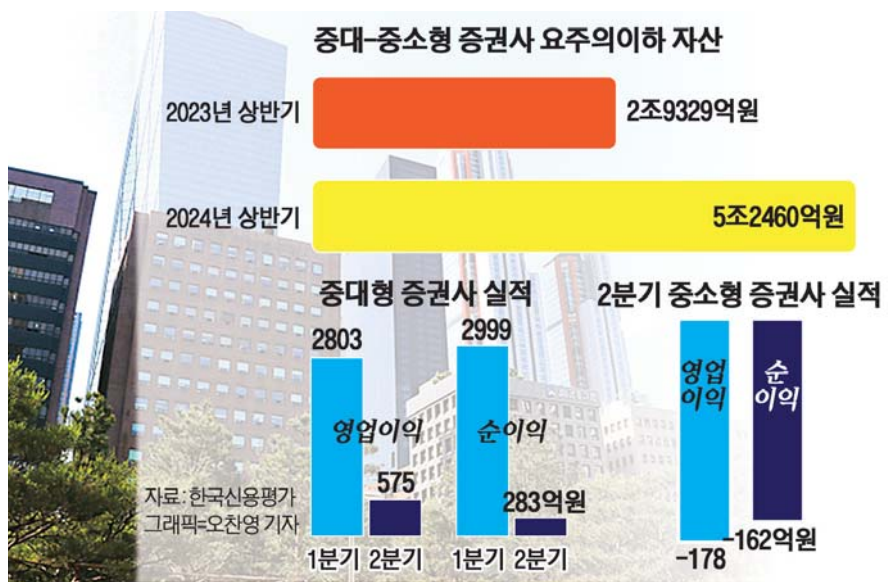
24일 나스신용평가는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직접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은 각각 2조 6000억원과 8000억원으로,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시나리오 기준으로 볼 때 상황은 최악이 아니다.

나신평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의 스포저 및 충당금 적립 규모는 약 3조 4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과거 시나리오 중 낙관적 또는 중립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6조 5000억원에 달하며, 강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평가 대상이 된 익스포저는 약 4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한다. 그 중 유의 및 부실 우려가 있는 금액은 약 3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12.1% 수준이다.

윤재성 나신평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의 자본규모와 경성적 수익창출력을 감안하면 추가 적립 충당금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부실이 크



게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나신평은 중소형 증권사 및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추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나신평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 등 총 9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대신증권·유안타증권·BNK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을 대형 증권사로, 그 이하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SK증권·한양증권 등을 중소형 증권사로 분류했다.

지난 2분기 중대형 증권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75억 원, 283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2803억원과 2999억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이 52% 증가하면서 실적 악화에 기여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사정은 더욱 나쁘다. 지난 2분기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8억 원, -162억 원으로 전분기와 달리 적자 전환됐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충당금 적립액이 160% 급증한 탓이다.

중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의 추가 위험 가능성도 있다. 12일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상반기 중대형과 중소형 증권사의 주요의이하 자산은 5조 2460억원이라고 밝

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9329억원과 비교할 때 2조 3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나신평은 BNK와 iM, IBK, 한화, 현대차 등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2020~2022년 신용등급이 상향된 5개사는 당시 수준의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과 순이익에서 당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소형 증권사 역시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이 부족하고 자본 완충력이 열위한 상태에서 실적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우투자증권과 SK증권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저하와 자본 완충력 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연구원은 “비종투사가 사업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비종투사가 단기간 내 부동산금융부문을 대체할 사업부문을 찾아 이전만큼의 수익창출력 회복을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ENERGY INDEX (23일)	
원유(달러/배럴)	
브렌트	-0.59 73.90
두바이	-0.57 74.37
광물	
금(달러/온스)	+6.84 2628.72
은(센트/온스)	-0.42 31.09
동(센트/파운드)	+0.45 434.75
납(달러/톤)	-2.48 2014.32
아연(달러/톤)	+8.33 2847.35

SAMSUNG 삼성선물 거래문의: 02-3707-3699

**9MW 약목에코파크 연료전지 SK이터닉스, 상업운전 개시**

SK이터닉스(SK eternix)는 고효율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발전소인 '약목에코파크'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한 약목에코파크는 설비 용량 9MW 규모이며, 연간 74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약목에코파크는 대신이엔지 및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하며,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SK이터닉스는 지난해 12월 SK에코플랜트와 구성한 SK컨소시엄을 통해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계약을 체결해 총 6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300㎡(약 1300평) 부지에 약목에코파크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SK이터닉스는 청주에코파크(20MW), 음성에코파크(20MW), 칠곡에코파크(20MW)에 이어 약목에코파크(9MW)까지 누적 69MW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574G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충북 보은연료전지(20MW)가 연말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면 누적 운영 규모는 89MW에 이르게 된다.

윤병호 기자

**한남, 데이터센터 폐열 재활용 '저탄소 수급체계 구축' 업무협약**

한남이 반도체 공정, 데이터센터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적극 활용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4일 삼송지사서 이병희 한남 사업본부장, 이규성 이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부산 에너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집단에너지 저탄소 수급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남 삼송지사는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한남이 받아 이를 지역난방에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저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많은 건물이다.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건물 내 IT장비가 소비하며, 이때 발생하는 다량의 열이 버려지고 있다.

윤병호 기자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시급…국제협약 제정 필수”**

민중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공 여부 한국에 달려 있어”  
전문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심각해… 국제협력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국제 협력과 국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 감축이 시급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이학영·송옥주·박해철 민주당 의원 주최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 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환경운동연합,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중립대학원 ESG연구소, 소비자권익포럼도 공동주최했다.

포럼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실시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의 예산이 2020년 17억원에서 2023년 13억원으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외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해양 플라

스틱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시켰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탈플라스틱 대응 사업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예정”이라며 “이 협약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황정준 그린플라스틱연합회 총장이 발제를 맡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총장은 지난 3년간 그린플라스틱연합이 연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201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4억6000만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그 중 23%에 해당하는 8200만톤이 바다와 자연환경으로 유출됐



24일 이학영·송옥주·박해철 민주당 의원 주최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환경운동연합,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중립대학원 ESG연구소, 소비자권익포럼도 공동주최했다.

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경계하며, 플라스틱 감축이 인류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황 총장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나 감축을 넘어, 전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의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과 국내 재활용 실태를 비교하며, 한국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서 주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단호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될 것이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단 교수는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인간의 혈액과 폐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육상 관리가 핵심”이라며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해

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페어구를 지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10% 이상이 페어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페어구의 추적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생분해 플라스틱 ‘기후·에너지·플라스틱’ 문제 한번에 해결”**

오는 11월 부산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플라스틱 국제조약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그에 앞서 대략적인 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안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분야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다.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차적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중립에 효과적이고, 발효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친환경 에너지화도 가능하며, 퇴비화도 가능해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3일 플라스틱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등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할 다양한 제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5차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안 이도출되기 때문이다. 유엔 회원국수와 동일한 수의 참가국들이 만장일치 또는

11월 부산 플라스틱 오염방지 정부간협상위 개최  
법적 구속력 가진 국제조약 최종안 도출, 생분해도 논의  
식물성분 활용 탄소흡수, 에너지화·퇴비화 가능  
환경부 규제샌드박스·인천대 바이오가스 실증 착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 및 결하면 각국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형식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징과 이를 증명하는 실증실험 등이 소개되고 이를 통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역할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NC2차 회의때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최종회의인 이번 부산회의에서 주요 사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글로벌적으로 매년 약 4억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이 가운데 약 40%가 일회용품으로 사용된다. 생산된 플라스틱은 10%

만 재활용되고, 20%가 소각되며, 50%가 매립되고, 20%가 무단투기되고 있다.

재활용율이 10%에 머무는 이유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에 이물질이 묻기 마련인데,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세척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각 내지는 매립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각은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매립 역시 토양을 오염시키고 썩지도 않아 후세대를 위한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100% 분해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어도 매립 또는 발효를 통해 전

환경적 처리가 가능하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썩지 58도 이상의 고온에서 30~45일이면 대부분 분해된다. 다만 자연온도에서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의 분해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생분해 플라스틱도 자연온도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일반 플라스틱 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또다른 특징점은 탄소중립에도 유리하고 에너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가장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많이 사용되는 폴리락티드(PLA) 폴리머의 경우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다. 식물 성분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생장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탄소감축효과가 있다.

또한 식물 성분은 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발효 시 바이오가스(메탄)가 생성된다. 이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나 축분 등과 혼합해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는 올해 6월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증사업에 들어갔으며,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실증연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대학교 기숙사 에너지로 사용하는 추가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강동구 인천대 화학과 교수(산학협력단 바이오플라스틱)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가 빠르게 이뤄지고,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에서 에너지화가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플라스틱의 비분해 단점을 채워 순환경제가 가능하고, 공기 중 탄소 흡수 및 에너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호 기자 chyybh@ekn.kr

**탄소중립 위해 ‘기술·금융’ 협업…범국가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9개 민간 기관 협력…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

정부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4일 서울 마포 디캡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여 기관 대표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

업을 발굴해 이들이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2050

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주관하며, 그동안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해 온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기획됐다.

한 총리는 발대식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과학기술 투자,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과 금융이 협업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정

부와 민관이 힘을 합쳐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번 ‘넷제로 챌린지X’에는 △대안상공회의소 △소상공벤처스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신한은행 등 다양한 민간 기업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지원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보육 및 투자 지원을 진행하며, 창업 사업화와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선발에 나서 오는 12월에 통합공고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각 참여 기관은 개별적으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보육을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 패키지,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과 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윤수현 기자

# 이제중 “국가경제 발전 위해 임직원들과 적대적 M&A 막을 것”

〈고려아연 부회장〉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막겠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은 투기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 부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핵심기술인력 20명도 참석했다. 최근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응하는 성격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재와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명 달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자회견서 영풍·MBK 인수시도 비판 영풍 경영진 사업리스크·인력 감축 지적 “석포제련소 정상화 투자 관심 없어” 산업경쟁력↓·핵심기술 해외 유출 우려 고객사 80곳에 ‘품질 유지 요청서’ 발송

기술력과 전문성 및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며 “핵심기술인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현 경영진과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비철금속 1위 기업으로서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를 지속했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비전을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강조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이제중 부회장(앞쪽 왼쪽 4번째) 등이 M&A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반면 영풍은 적자가 이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반박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영풍은 경영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주 매입에 집중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형진 영풍 고문은 그간 석포제련소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 등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이 모든 책임은 영풍을 실질적

으로 경영한 장 고문에게 있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MBK파트너스를 향한 화살도 날렸다. ‘기업 사냥꾼’이 고려아연을 차지하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2차전지 소재사업과 자원순환 사업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앞서 △한국엔컴퍼니 △휴스틸 △한국금거래소 등 80곳에 달하는 고객사가 ‘고려아연 품질 유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독단적인 경영을 펼치고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자금 확보를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1조4905억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은 5.7% 수준으로, 이자비용만 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이 MBK 측의 배당 확대 요구를 인수 자금 회수로 보는 까닭이다.

이 부회장은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분쟁에 대한 질문에 “기술자로서 최윤범 회장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영풍의 폐기물을 고려아연이 처리하는 것을 최회장이 막으면서 장 고문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사의 실적 차이에 대해서는 사람 관리를 포함한 경영능력과 기술 능력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도 사건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나, 최 회장 주도로 안전인센티브 등을 도입한 결과 3년간 중대재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번 기자회견이 기술 유출 등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악의적 구호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회사의 핵심인력들을 논란의 중심에 몰아넣고 최윤범 회장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고 반론을 폈다.

또한 △해의 경쟁사 대비 고려아연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 △원아시아파트너스펀드에 대한 출처의 이사회 검토 △이그니트홀딩스 인수 자료 작성 근거 △사사주 소각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자본 0.8%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이 ‘백기사’로 언급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 삼성전자, 중소·중견 협력사 ‘ESG펀드’ 조성 돕는다

금감원·5대 금융지주와 3자 협약 체결...예치금 1조원 협력사 무이자 대출 가능 상생 문화 확산...한중희 부회장 “ESG 경영 기반 위해 자금·기술 지원 도울 것”

삼성전자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5대 금융지주와 국내 협력 회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협력사 ESG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로 삼성 본관 앞 사기(社旗)가 휘날리는 모습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한중희 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진우동 신한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은 1조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고, 중소·중견 협력사들은 예치이자·감면 금리를 활용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함께 노력하는 사례로 향후 상생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ESG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사는 협력사들이 ESG 경영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자금·인력 양성·기술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각 8000억원, 2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협력사 ESG 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들이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규제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SG 펀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해 향후 6년간 협력사의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력사가 사업장 환경·안전 개선·에너지 사용 저감 등 ESG 투자 계획을 수립해 대출을 신청하면 삼성전자와 은행은 자금 목적이 ESG 부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협약주체 간 협력을 조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최장 3년 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초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5대 은행은 삼성이 예치한 재원을 관리해 협력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필요 시 중소기업 사업장의 재해 예방과 탄소 감축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영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 삼성전자, 업계 최초 8세대 V낸드 적용 차량용 SSD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8세대 V낸드를 적용한 PCIe 4.0 차량용 SSD AM9C1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차량용 SSD AM9C1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에게 업계 최고 속도 256GB(기가바이트) 샘플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번 256GB 제품은 각각 4400MB/s, 400MB/s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를 제공하고 전작 대비 전력효율은 약 50% 개선돼 차량 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 지원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장한다.

이번 제품은 △5나노 기반 컨트롤러 탑재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 강화 △SLC 모드(SLC mode) 기능을 지원한다.

조현덕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상무는 “삼성전자는 업계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력 중이며, 이번 제품을 통해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LC 모드 기능을 통해 제품을 TLC에서 SLC로 전환하면 SSD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빨라져 차량 내 고용량 파일에 더욱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56GB AM9C1 제품을 연내 양산하고, 차량용 고용량 SSD에 대한 고객의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용량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8세대 V낸드 기준 업계 최고 용량인 2TB(테라바이트) 솔루션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 양산 예정이다.

이번 제품은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 Grade2를 만족해, 영하 40°C에서 영상 105°C까지 폭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

김윤호 기자 kyh81@ekn.kr

##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앞자리에 한국전력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 ‘확률조작’ 넥슨 219억원 보상...게임업계 초긴장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자에 보상 지급 위메이드·웹젠 등 ‘조작 의혹’ 게임사 제재 방향에도 관심 쏠려 ‘脫 확률형’에도 속도...도전 보상·배틀패스 등 새 BM 발굴 나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에 이어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게임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들에게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규모의 넥슨캐시를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집단분쟁조정

확률 조작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대규모 법적 분쟁 진행 전 타협점을 제시해 선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후로 확률 조작의 촉에 휘말렸던 게임사들의 제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기업 중 법 시행 이후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등 5 곳이다.

이들이 받는 조작 혐의가 넥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처분이 나올 경우 집단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넥슨과 마찬가지로 과징금과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잖다.

이번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 회장(변호사)은 “보상 대상에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이용자들까지 포함한 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게임사에서 확률 조작 관련 법적 분쟁이 이뤄질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식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관련 피해 보상 공지

중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업계의 ‘탈(脫) 확률형아이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수익모델(BM)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게임플레이 시간이나 특정 도전과제를 완료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배틀패스를 채택하는 추세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BM으로 자리매김해온 시간이 상당한 데다 여타 BM보다 수익성이 높은 만큼 ‘완전 탈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매출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 75%에 달한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포함 32%임을 감안하면, 게임산업 전체 매출 약 22조원 중 18~19조원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 셈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

지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같은 일부 장르에선 확률 요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은 만큼 추가 비용 투입 등 부담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률 요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새로운 BM 발굴 과정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태중앙대 게임학부교수는 “확률 요소를 아예 배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세련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BM을 개발하거나, ‘검은 신화: 오크’와 같이 게임 개발 방식 및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롤플레이 나 액션 RPG 싱글 플레이어의 경우 확장팩 등으로 세계관을 확장한다거나, 스토리텔링이나 그래픽 연출 등 측면을 차별화하는 등 유저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성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고주영 삼성SDI 부사장이 24일 열린 KABC 2024서 발표하고 있다.

## K-배터리 기업 한 자리에 미래전략 공유로 ‘캐즘’ 뚫는다

SNE리서치 ‘KABC 2024’ 개최...삼성SDI·SK은 참석 배터리 시장 수급·대응 전략 조명...어려움 극복 대안 제시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SK은 ‘LIB 고성능화 비전’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집중...“배터리 안전성 확장해나갈 것”

국내 배터리 업계 대표 주자들이 ‘KABC 2024’에 모여 각사의 기술력과 미래전략을 공유했다. 첫날 행사에 참석한 삼성SDI와 SK은 배터리 시장을 덮친 ‘캐즘’을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너지 시장 조사기관 SNE리서치는 일한국과학기술관에서 제15회 KABC(Korea Advanced Battery Conference)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행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캐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배터리 시장 수급, 투자, 대응 전략을 조명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엔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삼성SDI, SK은, CATL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사의 산업에 대응하는 배터리 사업 전략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SDI에서는 고주영 부사장, SK은에서는 이준하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차세대 배터리’였다. 최근 중국의 ‘저가 LFP 공세’를 막아낼 수단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SDI와 SK은은 각사의 차세대 배터리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SK은은 리튬이온배터리(LIB) 고성능화에 집중한다. 기존 배터리의 고성능화를 통해 주행거리 위주에서 ‘가속경쟁력, 안전성’으로 넘어가는 전기차 시장 트렌드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K은 이준하 연구위원은 현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짚었다. 이위원은 “5~10년 전에 EV 시장 초창기엔 에너지 밀도와 주행 거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며 “반면 최근엔 차량 세그먼트의 다양화, 충전 인프라 보급 등으로 인해 에너지 밀도보다 가격 절감과 화재 안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은은 2018년에 아이오닉 5에 당시 최고 수준의 급속충전 기술을 탑재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이젠 LFP배터리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안전성에 대응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하이니켈 NCM배터리도 LFP처럼 가격경쟁력, 안전성을 보유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준하 위원은 “LFP배터리가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서 안전성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추후 이를 미들니켈, 코발트프리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술 발전을 통해 LFP 배터리의 인기를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는 기술개발을 꾸준히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는 공극의 안전성을 토대로 공극의 에너지 밀도를 담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체의 무게를 낮춰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 이외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도 예고했다. 그는 “자사의 전기차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 양산 예정”이라며 “전고체 이외에도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일본, 보스턴 상하이, 독일 등에도 R&D 센터를 개소하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캐즘을 위기가 기회로 받아들이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은은 기존 리튬이온배터리(LIB) 고성능화에 집중한다. 기존 배터리의 고성능화를 통해 주행거리 위주에서 ‘가속경쟁력, 안전성’으로 넘어가는 전기차 시장 트렌드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K은 이준하 연구위원은 현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짚었다. 이위원은 “5~10년 전에 EV 시장 초창기엔 에너지 밀도와 주행 거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며 “반면 최근엔 차량 세그먼트의 다양화, 충전 인프라 보급 등으로 인해 에너지 밀도보다 가격 절감과 화재 안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은은 2018년에 아이오닉 5에 당시 최고 수준의 급속충전 기술을 탑재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이젠 LFP배터리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안전성에 대응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하이니켈 NCM배터리도 LFP처럼 가격경쟁력, 안전성을 보유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준하 위원은 “LFP배터리가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서 안전성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추후 이를 미들니켈, 코발트프리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술 발전을 통해 LFP 배터리의 인기를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는 기술개발을 꾸준히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icw@ekn.kr

## ‘이용자 1%’ 3G 종료 논의에도...통신사 “서비스 지속할 것”

3G 휴대폰 회선 수 59만4550개 전년동기비 25%↓...전체 1% 수준 과기부 “3G 서비스 조기 종료 가능” 통신사, 종료 아닌 서비스 지속 의사 이용자 반발 등 기업 이미지 타격 우려



서울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3세대 이동통신(3G) 이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년 새 20%가 넘게 줄며 전체 이용자의 1% 남짓한 인원만이 3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쓸모가 줄어든 3G 서비스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지속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3G 휴대폰 회선 수는 지난 7월 기준 59만4550개로 전년 동기(78만8717개) 대비 25% 줄었다. 전체 가입 회선(5683만2696개)에서 비중은 1.04%에 그친다.

사업자별로 보면 7월 SK텔레콤의 3G

회선 수는 28만1669개, KT와 알뜰폰(MVNO)은 각각 9만629개, 22만2252개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자 모두 지난 1년 간 매달 이용자 감소를 겪었다. LG유플러스는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바로 LTE로 넘어가 3G 회선이 없다.

3G 이용자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구 위플라이스에서 중장기 주파수 전략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남영준 과

기정통부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업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검토해 3G 서비스를 미리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KT가 제공 중인 3G 서비스용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오는 2026년 말까지만이다.

정부가 해당 시점 이전 조기 종료 가능성을 열어줬음에도 통신사는 3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통신사 관계자는 “(3G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3G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이용자 보호 문제가 있는 만큼 통신사가 3G 서비스 종료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결과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G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60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존재한다”며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이들에 대한 보상 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시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이 염려된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사들이 3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2026년까지 3G 서비스를 붙잡고 가진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용자가 급감한 3G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도이체텔레콤은 2021년 3G 서비스를 접었다. 미국 3대 통신사인 AT&T, T모바일, 버라이즌은 2022년 나란히 3G 서비스를 중단했다. 올해 들어 일본 소프트뱅크, 싱가포르 심텔 등도 3G 서비스 종료 대열에 합류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 카톡 서비스 장애 반복에...과기정통부, 세 번째 긴급 현장점검

올해만 5차례나 먹통...원인 확인 나서 사전테스트 미 실시 등 시정조치 점검

정부가 올해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서비스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판교IT밸리에 위치한 카카오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5월 서비스 발생한 장애 관련 시정조치 결과가 잘 이뤄지고 있는

지, 이달 20일에 발생한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은 당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장 점검 결과는 2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에서 송·수신 오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건 올해만 벌써 5차례다. 지난 5월 8일과 13일, 20일, 21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메시지 수·발신과 PC가 톡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 18일에도 일부 사용자가 PC 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를 겪었으며, 이달 20

일 오전에도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장애가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밝혀진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명령(5월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21일) 등이었다.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카카오톡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5월 21일과 23일 두 차

레에 걸쳐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코드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 실시와 작업 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톡은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미편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버 시스템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 관리 철저, 이용자 고지 및 기준 마련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사항인 테스트 환경 고도화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구축 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민 기자

### 쿠팡, 충청권 신선식품 물류센터 준공 “1300명 고용”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 본격 운영  
축구장 10여개 규모, 중부권 배송 교두보

쿠팡은 24일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F C)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과 대전광역시가 2020년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풀필먼트 착공에 나선지 2년 만이다.

이번에 준공한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는 연면적 8만8000㎡ 이상(2만6620평) 규모로 축구장 10여개 크기도.

총투자금은 약 1800억원으로, 직고용 예상 인원은 1300여명이다. 쿠팡은 최초 투자협약 당시 전망한 고용인원(300여명)보다 1000여명 늘린 1300여명을 직고용할 방침이다.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는 쿠팡이 로켓프레시(신선식품 새벽배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가 대전과 충청권의 중소 제조사와 지방농가들의 물류비 절감 및 전국 신선식품 판로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농가에서 만든



쿠팡 남대전 풀필먼트센터 전경.

는 신선식품과 특산품의 직매입이 늘어나고 전국 단위의 빠른 배송으로 이들의 판로가 확대되는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망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전시민 우선 고용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며, 대전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두보가 되어 대전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번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 물류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선다. 대전을 비롯해 광주광역시·경북 김천 등 전국 9개 지역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1만명 이상을 직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예은 기자

## 배추 수급난에 포장김치 생산도 차질

CJ제일제당·대상, 일부 상품 판매 중단  
대형마트들 물가안정위해 할인행사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배추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가 지났음에도 배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유통업체에선 배추 1포기 가격이 2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왔다.

이같은 배추 가격 강세에 유통체인인 대형마트들은 물가안정 차원의 할인행사로 배추 가격 낮추기에 앞장 서고 있다.

반면에 국내 주요 포장김치 제조 식품사들은 배추 공급량이 줄어 재료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포장김치 상품의 판매가 중단돼 ‘김치 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폭염으로 배추 공급량이 줄면서 최근 주요 포장김치 제조사인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일부 김치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대상은 지난 19일 자사 홈페이지에 “현재 원물 수급 이슈로 중가 김치 생산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영업일 기준 2~3일 이상 배송 지연이 발생 중”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대상 자체 온라인몰 정월e샵에서 판매하는 ‘중가 시원하고 깔끔한 포기김치 3.3kg’, ‘중가 생생유산균 포기김치 3.2kg’ 등 일부 제품은 ‘일시품절’ 상태다.

CJ제일제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CJ제일제당은 이날 기준 자사몰 CJ더마켓에서 판매해 온 ‘비비고 포기배추김치 3.3kg’, ‘비비고 썰은배추김치



폭염으로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판매되고 있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배추.

900g’ 등 일부 포기김치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다만,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배추 수급이 아예 끊긴 것은 아니다. 센터 내 재고가 없으면 임시 품절 처리했다가 다시 푸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며 “가을배추가 들어오는 10월 중순 정도부터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지 공급 부족과 포장김치 판매 일시중단 등 김치대란 우려가 커지자 대형마트들은 배추 가격 안정과 수급 지원을 위해 배추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26일까지 자체 할인 및 농식품부 연계 할인 통해 손질배추(1통)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행사가 6384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할 할인을 통해 배추 1포기를 5990원에 판매중이다. 롯데마트도 농할 할인 행사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배추를 20% 할인한 7992원에 판매한다.

대형마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산지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배추 공급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부 쿠폰(농할쿠폰)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알배기 배추와 같은 김장배추 대체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마트들이 이처럼 배추 물가 안정에 나선 것은 배추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가 지났음에도 배추 가격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배추 한 포기(상품 기준) 당 평균 소매가격은 9321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50.51% 높았다. 지난 1일 기준 AT의 배추 한포기 소매가격(6455원)보다 3000원가량 더 치솟은 셈이다.

심지어 전통시장 등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포기당 가격이 2만원까지 치솟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 백화점, 10월 징검다리연휴 겨냥 가을 정기세일

롯데·현대·신세계 27일~내달 13일 일제히  
패션·가전 등 최대 50%, 전시·공연 가세

백화점업체가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가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올해 가을정기세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을 비롯해, 개천절·한글날 등 주요 공휴일이 몰린 10월 징검다리 연휴가 겹치는 만큼 패션상품 할인행사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 점에서 ‘슈퍼 스타일(Super Style)’을 테마로 가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일에는 약 500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겨울시즌(F/W) 신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한섬·삼성·LF 등 국내 주요 패션 그룹사와 협업한 ‘Autumn Outer Collection’ 행사에서 가을 주력상품인 윌피스와 간절기 재킷 등 가을상품을 10~30% 할인가격으로 선보인다. 가을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고객을 위해 의류·운동화 등 스포츠 인기상품은 10~50%, 가방·선글라스·스카프 등 잡화류도 최대 4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10월 황금 연휴 기간 쇼핑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도 선보인다.

황금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패션·잡화·스포츠 단일 브랜드를 당일 30만·60만·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동일조건으로 일부 브랜드를 롯데백화점 제휴 현대카드를 구매하면 1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도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가을 테마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패션·리빙·스포츠 등 200여 개 브랜드의 가을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

대 60% 저렴하게 선보이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와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더현대 서울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5층에 픽서울에서 뮤지컬 알라딘 팝업스토어를 연다. 포토북·키링 등 실제 뮤지컬 무대와 의상을 그대로 구현한 한정판 굿즈 20여 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판교점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겨냥해 10월 6일까지 10층 토포즈홀에서 ‘리빙 페스타’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LG·템퍼 등 다양한 가전·가구 브랜드가 참여한다.

목동점은 오는 29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다양한 의류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70% 할인해 판매하는 ‘나이키 대전’을 진행한다.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백화점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전시 및 공연 행사도 선보인다. 오는 28일 목동점을 시작으로 10월 12일과 19일에 각각 킨텍스점과 천호점에서 ‘하늘정원 가을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신백멤버스 페스타’ 타이틀로 300여 개 브랜드 상품들을 최대 10~50% 할인하는 가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남성·여성 패션을 비롯해 스포츠·아동·슈즈·핸드백 등 패션잡화와 침구·그릇 등 리빙 카테고리까지 300여 개 브랜드를 10~50% 할인해 준다.

대표 브랜드로는 나이키(10~20%), 손정완(20%), 슈즈미스(30~50%), 갤럭시라이프스타일(10%), 올젠(20~50%), 커버넌(10~30%), 미소페(20%), 어니스트서울(10~20%), 알레르망(20~50%), 빌레로이앤보흐(30~50%) 등이 있다.

백화점업체 관계자는 “올해 가을 신상품 구매 시기가 10월 황금연휴와 겹치면서 정기세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며 “패션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예은 기자

### 비비고만두, 내달부터 호주 ‘퀀타스항공’ 기내식으로

해외항공사가 국제노선 제공은 처음

CJ제일제당이 ‘비비고 만두’를 오는 10월부터 호주 대표 항공사 퀀타스항공(Qantas) 기내식으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항공사가 서울행이 아닌 국제노선에 기내식으로 ‘비비고’ K-푸드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납품 제품은 비비고 찐만두로, 스테이크고기 돼지고기&김치맛이 한 세트 구성돼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를 10월부터 호주에서 영국(런던), 싱가포르, 필리핀(마닐라), 일본(도쿄), 캐나다 등을 오가는 국제선과 퍼스(Perth)행 자국선 승객들의 간식으로 제공할



오는 10월부터 CJ제일제당이 호주 퀀타스항공에 납품하는 기내식 비비고 찐만두.

예정이다.

특히, 퀀타스항공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비비고 만두를 K-푸드 기내식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한다. 아울러 퀀타스항공 기내식 진출을 계기로 호주 내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o@ekn.kr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LOTTE CASTLE

# 체코원전 수출에 찬물 뿌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폭거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코원전 수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대통령이 팀코리아의 원전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로 떠난 바로 그날, 야당 국회의원들이 때맞춰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악소문을 유포한 것은 문재인정권의 망국적 탈원전을 이어가려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체코원전 수출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야당 의원들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기술 문제 제기에 대해 마치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오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캐나다계 사모펀드가 지배하고 있으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기업일 뿐이다.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국제적 수출통제 규제와 지식재산권 문제로 쉽지 않다는 것은 굳이 야당 의원들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UAE에 APR1400 원전 4기를 수출했고 이 원전들이 이미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 눈에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가 앞장서서 탈석유 문명의 문을 열어젖힌 세계사적 기적이 보이지 않는가?

이 어려운 일을 팀코리아가 유럽의 한 복판 체코에서 또 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때, 어찌 국회의원들이 팀코리아의 실패를 예단하고 수출활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내년에 최종 서명할 원전건설수출 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경제전쟁에 대통령까지 나선 마당에 국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최일선 아군의 등을 향해 총질하는 반국가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어이없는 희극은 낯선 일이 아니다. 2017년 봄, 영국에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수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여기저기 때 지어 몰려다니며 영국에 대한 원전수출 결사반대 시위를 감행하지 않았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영국측이 원전 수입을 포기하자 그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원전의 수출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으스스대지 않았던가? 것처럼 기가 막힌 망동이 원전최강국 건설을 다짐하는 윤석열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길 없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체코원전 수출이 “지지를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전 수출이 대통령의 아집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원전수출이라면 문재인대통령 시절엔 왜 원전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가?

야당 국회의원들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눈물겨운 노력이 8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한다. (주)한국수력원자력, 대우건설 등 기업들은 망국적 탈원전의 칼바람 아래서도 원전수출의 맥을 잇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황무지를 일궈왔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팀코리아의 숨은 노력에 대해 이처럼 무시할 줄은 미처 몰랐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체코에 대한 원전수출 포기를 요구한 데 이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투입할 자금을 재생 에너지사업에 투자하라고 친절하게 충고한 점에 주목한다.

2017년 6월, 느닷없이 불법으로 탈원전을 공식화한 것은 문재인정권이었다.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등 이른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고 “제2의 삼성전자가 탄생할 것”, “청년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갖은 교언영색을 늘어놓았다.

그 후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급속히 늘렸고 지금은 국토단위면적당 태양광발전시설 비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은 다음 질문에 답해 보라.

1.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혜로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부채가 202조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를 청산하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 각각 400만원씩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2. 지난해 기준, 전기 1kWh의 정산단가가 원자력은 57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REC포함 240원이다. - 우리 경제를 위해 늘려야 할 전원은 원자력인가, 재생에너지인가?
3. IAEA자료, 1kWh전기 생산에 따르는 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원자력 10g, 태양광발전 54g이다.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늘려야 할 전원은 원자력인가, 태양광인가?
4. 야당 국회의원들은 2012년부터 제주도 동남쪽 가파도에서 240억원, 주민 한 사람당 5천만원씩 투입해 시작했던 재생에너지100%(RE100) 실험이 무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5. 이런 현실에도 더불어민주당 등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정상모리배 카르텔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체코원전 수출에 대해 미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체코원전 수출에 정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재생에너지 업자들과 손잡은 당신들 아닌가?

2024. 9. 24

##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사)안전발전연구원,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 (사)에너지와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원자력정책연대, (사)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행동하는자유시민, CFE KOREA (사단법인 우선, 한글 자모순)

대표집필 :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대표 조기양 010-9105-1399

# “시니어 주택 뜬다”...건설업계, 시장 공략 박차

인구구조 변화 ‘시니어 주택’ 수요 증가...‘전용 평면’ 개발하며 차별화 시도  
현대건설, 14층 규모 노인복지 주택 조성...롯데건설,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

건설업계가 노인(시니어, Senior) 전용 주택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상 평균연령이 계속 올라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공급에 속도를 내는 수준을 넘어 전용 평면까지 설계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해 신한라이프케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금융그룹 생명보험 계열사인 신한라이프 산하의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전담 회사이다. 그간 축적해온 주거 공간 건설기술 및 노하우를 신한라이프케어가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확보한 경험과 접목하겠다는 게 현대건설 측 생각이다.

특화디자인도 연구한다. 현대건설은 길안내를 돕는 ‘히어 앤 썬웨어’(Here & Somewhere)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힐스테이트 지하 주차장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령이나 국적이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명료하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 ‘유

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이밖에 이지스자산운용과 서울 은평구에 시니어 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4층, 총 214가구 규모 임대형 노인복지 주택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의 경우 서울 마곡지구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7 르웨스트’를 건설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가구 크기의 의료 케어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시니어 입주민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한미글로벌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도 내년 3월 도심형 시니어 주택 ‘위례 심포니아’를 총 115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달 ‘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열고 시니어 전용으로 설계된 신평면을 공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8개 타입에 9가지 특화요소로 다양한 조합을 구현했다. 미래 가족구성 형태를 3~4인 가족에서 나아가 비혼·딩크·액티브 시니어 등으로 세분화했다. 시니어 부부 안방에는 침실 내부에 전용 거실공간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사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심포니아’ 단지 모형.

대우건설은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디자인을 연구하는 등 시니어 주택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펼치면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2동을 지을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시니어 주택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50여년 뒤인 2072년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9.2%다. 46.1세인 중위연령 또한 같은 기간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다. 이는 세계 평균(72.6세) 보다 10년 이상 높은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령별 인구분포의 변화와 함께 고령화 비율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니어 세대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필요성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일산 용적률 300%↑...2.7만채 더 공급  
1기 신도시 5곳 10년 후 54만호 도시로

정부가 일산 신도시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해 기존 10만4000가구에서 2만7000가구 늘어난 13만1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존용적률 상향 등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정해졌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성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세웠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360%이며, 이에 따라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다aniel 기자 daniel1115@ekn.kr

## 현장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 “고급 호텔 안 부럽네”...조경·커뮤니티 정성들여

‘꿈의 아파트’ 표방...숲 옮긴 듯한 정원·골프 연습장 등 리조트급 부대시설 조성

“5세대하인엔드급 아파트 답게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에 큰 힘을 쏟았다. 입주민들이 특별한 행복을 경험했으면 한다

지난 24일 방문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건설현장에서 만난 담당자의 말이다. 단순한 주거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단지였다. 남녀노소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을 것 같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문주.

사진=이현주 기자

그야말로 ‘꿈의 아파트’라는 표현이 맞아떨어진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16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높지만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상급 상품성을 갖췄다.

현재 10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리조트도시라는 슬로건에 맞춰 조경에 신경을 쓴 기색이 역력했다. 숲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230m의 중앙정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주요 테마공간과 연결 산책로, 경관 포인트 등의 조경바탕은 멀칭 작업을 통해 토양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색다른 비주얼을 연출해 조경의 고급스러움을 높였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조경 모습. 사진=이현주 기자

고급수중인 펜나무와 대형 전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을 식재해 단지 내 테마숲과 테마길을 만들며 형형색색의 자수화단도 조성했다. 유럽식 분수와 수경 공간, 음악과 여유가 흐르는 티하우스, 사계절을 단지에서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목과 관목 등도 식재됐다.

고급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끌었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실내수영장 등 리조트급 부대시설이 조성 중이다. 특히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1층과 2층에 골프 타석이 있는 복층 구조로 연습장의 길이는 30m에 달했다.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 내 인도어 골프연습장이다. 스윙 폼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GDR 기기는 물론 별도로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준비돼 있다. 피트니스센터에는 테크노짐 브랜드의 다양한 운동기구가 마련돼 있으며 댄스와 요가 등의 단체 수업을 할 수 있는 GX룸도 준비돼 있었다. 화려한 상층부에 등 이국적인 내부 인테리어로 장식된 실내 수영장도 조성 중이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프라이빗 상영관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식 서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인천 유일 탄소중립 ·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화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

# 그린에너지텍 2024 GreenEnerTEC

2024. 10. 30(수) - 11. 01(금) ◆ 인천 송도컨벤시아 Hall 4

주최

주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순환경제

탄소중립

기후변화&대기

친환경 플라스틱

**동시개최**

- ◆ 제3회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 | 10. 30(수)
- ◆ 2024 그린에너지텍 ESG 컨퍼런스 | 10. 30(수) - 11. 01(금)
-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 | 10. 31(목)
- ◆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 | 11. 01(금)
- ◆ 그린에너지텍 해외 수출상담회 & 공공 구매상담회 | 10. 30(수) - 11. 01(금)

특별 후원

후원

미디어파트너

주최

에너지경제

INDUSTRY TODAY

환경일보

한기경제

에너지데일리

PK KOREA

문의: (주)지엠이치 Tel. 02-565-0501 Email. greenenertec@gmeg.kr www.greenenertec.com



###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1917원 확정

올해보다 5% 상승...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 인상률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917원으로 확정했다.

부산시는 24일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보다 5% 상승했으며, 이날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9만653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다.

이달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할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이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인데, 부산은 5%의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박 시장은 직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부산교통공사자회사 부산도시철도 운영 서비스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 생활임금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에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논의한 결과"라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상욱 기자 lee6654@ekn.kr

### 광주시, 내달부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실시

10월 1~18일까지 5000원에 접종

광주광역시는 광견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서 기르는 개·고양이다. 지난해까지는 개에 대해서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양이까지 확대 지원한다. 개·고양이 모두 동물등록을 마친 개체만 가능하며,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접종이 안 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장지(외장형·인식표)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 예방접종

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비용은 평소 2만~3만원이지만 이 기간에는 5000원만 내면 된다.

광주시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백신 4000두 분량을 지정 동물병원 80여 곳에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며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접종과 목줄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 iM뱅크, 2024 하반기 신입 인재 채용 실시

일반금융·디지털·ICT 부문 모집

iM뱅크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우수 금융인재 확보 및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번 채용은 일반금융·디지털·ICT 부문의 인재를 확보하는 '채용 연계형 인턴'과 리테일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리테일금융' 부문의 채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채용 연계형 인턴의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리테일금융 채용의 경우 10월 중 서류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채용의 지원서 접수는 은행 채용 홈페이지 (http://im.recruiter.co.kr) 를 통해 진행된다.

채용 연계형 인턴의 경우 '일반금융·디지털·ICT' 3가지 부문의 모집분야로

진행된다. '일반금융'은 수도권, 대경권, 충청·전라권, 부울경 권역으로 구분하여 채용이 진행되며, 수도권 외 권역은 최종 학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재가 지원 가능하다. '일반금융(수도권)·디지털·ICT'는 제한이 없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AI역량평가포함), 필기전형, 1차 면접, 인턴십(2주),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11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리테일금융 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경권, 충청·전라권, 부울경 권역으로 채용이 진행되며 각 권역별 지원자격은 채용 연계형 인턴의 일반금융 지원자격과 동일하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으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하며, 마찬가지로 11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송준모 기자 jmsn220@ekn.kr

### 예천군, 농기계 전복사고 방지 스마트 감지 시스템 구축

예천군은 최근 증가하는 농기계 전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스마트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기울기 센서를 통해 농기계 전복을 실시간 감지하고, 관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천군이 2023년 '스마트모빌리티안전솔루션' 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됐다.



예천군이 농기계 전복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이번 도입을 통해 농업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고, 향후 시스템 효과 분석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천=정재우 기자

## '음식축제' 국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7일 개막

음식명인 요리 3000원에 제공 정지선 등 스타셰프 다이닝도 불꽃쇼·축하공연 등 진행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오는 27일부터 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음식에 푹 빠지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중 남도 명인 푸드쇼에선 남도 음식명인의 음식을 30주년 기념으로 3000원에 맞출 수 있다. 오는 27일 오

전 10시 김봉화 명인의 집장, 낮 12시 김영숙 명인의 양금절편, 28일 오후 1시 최윤자 명인의 모시잇떡, 오후 3시 임화자 명인의 육포, 29일 낮 12시 천수봉 명인의 흥어무침을 선보인다.

22개 시군관에서는 시군 대표 음식을 관람객이 직접 맛보고 현장 스티커투표를 통해 인기 음식도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시간대별로 특산물 시식 이벤트도 진행돼 다양한 전남의 농특산물을 맛보며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시식 특산물은 나주 배 식혜(일 210잔), 담양 유과(일 100개), 고흥 오란다(일 2천개), 무안 고구마말랭이(일 100개)

등이다.

30주년 기념 글로벌 미식존도 운영한다. 남도음식의 글로벌 콘텐츠를 위해 미술관 스타 니시무라 셰프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해 정지선 셰프, 바비큐 덮밥(남준영 셰프), 라멘(니시무라 다카히도 셰프), 빼애야(오세득 셰프) 등을 만들어 선보인다.

또 반올림피자와 협업해 전남 특산품인 '고흥 유자, 영암 무화과'로 개발한 '남도 1호 피자'를 축제 기간 매일 1800여 명에게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막식 축하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7시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시작으로 이찬원, 하이키, 박규운, 이젤 등이 무대에 오른다. 28일 오후 7시에는 '정선희·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공개방송이 목포문화예술회관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초대가수로 신유, 소찬휘, 현진영, 정다경, 전종혁 등이 출연해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큰잔치를 찾는 방문객이 다양한 남도음식을 맛보고 즐기도록 막바지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이정진 기자 leeji0537@ekn.kr

## 고양시민 "고양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속 추진돼야"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고양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고양시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염원했다.

고양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일 부터 20일까지 19일간 실시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100여명 고양시민이 토지이용계획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열람했고, 50여건 주민의견서가 제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제출된 주민의견 중 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시민은 고양JDS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고 고양시는 강조했다.

19일간 주민의견 청취 절차 시행 경제자유구역 필요성 목소리 ↑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고양시민은 고양시가 중점규제로 인해 기업유치 한계와 산업기반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베드타운에 머무르고 있는 고양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점규제와 베드타운을 극복하고, 글로벌 자족도시를 나아가기 위해 고양JDS지구 약 17.66km<sup>2</sup>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2년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고양시는 경기도와 함께 최고 수준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담은 개발계획

을 수립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인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20일 마무리했다.

정태호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팀장은 "이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고양 발전과 고양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시민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꼼꼼하게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천시 내촌면 '내촌 포도' 벽화작업 포천시 내촌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내촌의 특산물 포도를 활용한 내촌 포도 벽화그리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벽화 그리기 작업에는 내촌초등학교 및 내촌중학교 학생, 지역단체 등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내촌 포도를 주제로 벽화를 그려, 내촌 포도 매력을 알리고 아름다운 내촌면을 만들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주민 손으로 그려진 벽화로, 더 아름다운 내촌면이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강근주 기자

### 울산시-울산경찰청,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 북구 의사회관 3층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양 기관이 각각 출동해 대응했는데, 이런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설치했다.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 개입팀 14명과 울산경찰청 경찰대응팀 4명으로 운영 인력이 구성됐다. 이들은 5인 1조로 나뉘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 진행한다. 특히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 팀으로 움직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대응은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울산경찰은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치안 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신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울산=이상욱 기자

### 경기도, 여주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는 24일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일원 약 20만㎡ 규모의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동 상권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상규 경기도재생관리팀장은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송인호 기자 sin31@ekn.kr

# “격식 얽매이면 ‘도민과 소통’ 놓쳐...의원은 일로써 권위 보여야”

[강원 의회의 비전과 방향] 김시성 강원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3차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 특례화의 방향, 자치권 강화 방안 등 강원도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의회의 수장’으로서의 통찰과 전략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들이 말하는 강원도의 미래와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구현될지, 그 비전을 통해 도출되는 전략들을 심도 있게 다뤄본다. 그 시작으로 본지는 김시성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도의회의 의정실에서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대담 : 박에스더 강원취재본부장

김시성 의장은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의정으로서 지역구를 찾기도 하는 태백 시장을 찾았다. 사소하지만 세심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한 획을 그은 태백이 인구소멸로 4만명도 무너졌다.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이 가서 팔아준다든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 추석석명절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얼굴에 웃음이 없어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시성 의장과 의정 일문일담

-제9대 강원도의회에 이어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 의장이 됐다. 취임 소감 한마디

▶ 먼저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여러 의원들이 나를 선택해줬다. 기본 마음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한번 맡아 도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좋은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다. 나는 다양한 기준 가운데 조직원과 원활히 소통하고 조직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말했지만 이번 의장 임후보 정견발표 과정에서 ‘군립하지 않는 의정’이 되겠다고 밝혔던 것 역시 이러한 가치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권위적인 걸 너무 내려놓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의원들은 일로써 권위를 보여야 할 때다.

-의정 간소화, 의정성 높이기 등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운영방침은

▶ 잘 알겠지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지역소멸 등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격조와 의정 등 형식이 얽매면 교류와 소통이라는 대의민주 정치의 중요한 덕목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 형식의 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누가 뭐라해도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교류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 지방의회의 역할은 도민들의 민의를 받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지원을 위해 24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용하는 등 집행부를



김시성 제11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가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가 최대 현안...경기침체·지역소멸 위기극복 최선 의회 전문성·역량 강화 중점...도민과 밀접한 상임위가 의회 중심 되도록 지원 당리당락 떠나 ‘집행부 견제와 협치’ 본래 역할 충실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우선 과제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우리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도정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많은 현안이 산재해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가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많은 도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당초 강원도가 준비했던 여러

특례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까닭이 제일 크다고 본다.

앞으로는 도민 여러분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상생 방향은

▶ 같은 당이 지사인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김진태 지사의 주요 역점사업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일부 사업

들에 대해서는 원점재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의회의 본분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론, 원주반도체 클러스터,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춘천-홍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또한 구축해 나가겠다.

-인구감소와 탈지방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책은

▶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통한 탈지방화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도의 경우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육아기본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방에 자리잡게 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춘천-홍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신생아 출산을 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 육아돌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 먼저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으로서 개인적 목표보다는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 많은 도민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개인적인 목표를 말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변화를 이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다.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아직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큰 변화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를 이끌 다양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했다는 보고를 도민들께 조속히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도민에게 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제11대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밝혔던 소신과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의정으로 기억되고 싶다.

또한 앞서 말했다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의회의 본분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치와 소통이 조화되는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ss003@ekn.kr](mailto:ess003@ekn.kr)



## 2024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 풍기인삼축제

2024. 10. 05. 토  
9일간 10. 13. 일

장소 |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및 남원천 일원

주최·주관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영주시  
문의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054)639-6612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ginsengfestival.co.kr](http://www.ginsengfestival.co.kr)

# 기후변화와 태양광 발전의 신흥 강국들

EE칼럼  
Energy&Environment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BNEF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는 592GW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것이며 이는 역대 최대 신규 설치량을 기록했던 2023년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다. 2023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위 국가였던 중국은 2023년 216.9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22년 86.1GW 대비 152% 증가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도 7월까지 126.1GW를 설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고 7월까지의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280GW 이상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실시간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적하는 Cleanview에 따르면 2023년 유틸리티 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19.3GW 추가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72%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38GW를 추가할 것이며 이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던 지난해의 거의 두 배다. 태양광 설치 강국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흥 강국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태양광 발전량 순 증가량 순위를 보면 1위는 중국으로 2022년 대비 224TWh 증가했고 2위는 브라질로 38TWh 증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 이란,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그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56위로 0.2TWh 증가했다. 반면 인구수 5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2022년 대비 2023년 태양광 발전량 증가율 순위를 보면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로 153%, 2위 UAE 78%, 3위 이란 55%였으며 우리나라는 인구수 관계없이 전체 국가 중 66위로 증가율은 0.4%였다.

한편 Ember의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 현황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가장 많은 중국 태양광 모듈을 수입한 나라는 네덜란드로 47.2GW였다. 지난해 약 4.3GW를 신규로 설치했고 나머지는 국외의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위는 브라질로 21GW, 3위는 인도로 14.5GW, 4위 스페인 12.2GW, 5위 사우디아라비아 8GW, 6위 파키스탄 7.9GW가 뒤를 이었다.

2024년 7월까지의 네덜란드가 1위로 28.5GW, 2위 브라질 12.8GW, 3위 파키스탄 12.5GW, 4위 인도 10.5GW, 5위 사우디아라비아 9.7GW 순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23년까지 누적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2GW였는데, 2023

년 8GW의 중국 태양광 모듈을 수입했고, 2024년 7월까지 9.7GW를 수입했다. 수입된 모듈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이내에 설치된다고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글로벌 신규 태양광 설치국가 10위 이내 진입이 유력해 보인다. 파키스탄 또한 2023년까지 누적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1.2GW였는데, 2023년 7.9GW의 중국 태양광 모듈을 수입했고, 2024년 7월까지 무려 12.5GW를 수입했다. BNEF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세금이 파키스탄의 상업 및 산업(C&I) 태양광 프로젝트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지난해 같은 기간 글로벌 순위 14위에서 올해는 5번째로 큰 신규 태양광 투자 시장으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미국, 인도 등 전통적인 태양광 강국들의 질주와 함께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UAE, 이란, 폴란드 등 신흥 강국들이 부상하고 있다. 스페인 등 여러 나라는 이미 가장 큰 발전원이 태양광이 되었고 7월 기준 역대 최대 태양광 발전량을 기록한 나라도 Ember 통계 기준으로 최소 11개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역성장했고 관련 지원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3년 연속 축소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처리할 할 비용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걸 우리 정부만 잊은듯하다.

# G20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김봉철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2024년의 G20 정상회의가 가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roup of 20의 약자인 G20은 국제경제와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개의 선진 및 신흥 경제국이 1999년에 출범시킨 협의체이다. 특히 G20의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국 정상들의 모임이다.

G20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2/3, 세계 총생산량의 90%, 국제무역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G20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내용과 그 이행은 국제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

G20에 속하는 국가의 대표자들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EC B(유럽중앙은행)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1년 동안 셰르파(Sherpa) 회의, 장관급 회의,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등 여러 종류의 회의에 참여한다.

정상회의가 시작된 2008년 당시에는 경제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G20 설립의 목적이 국제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탄력성의 확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와 관련된 국제정치와 안보 논제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AI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추세이다.

올해 G20의 의장국은 브라질인데, 이번 G

20 정상회의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의 구축'(Building a Just World and a Sustainable Planet)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1차 셰르파 회의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 대응'(Social inclusion and the fight against hunger and poverty),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transitions),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Reform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을 G20가 국제사회를 위한 우선 과제라고 소개하였다.

올해 2월에 개최된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브라질은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자기구의 실패를 언급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수를 확대하고 UN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G20 셰르파 회의에서 언급했던 3개의 우선순위 중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에 관한 것이며, 브라질이 UN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이러한 내용에 관한 G20 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무역과 국제경제에 의존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과 한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제경제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와 기업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11월에 개최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전반에 놓인 문제들을 국가지도자들이 논의하는 무대이므로, 지금은 한국의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의장국인 브라질의 목표,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도를 차분하게 파악하며 의견을 개진할 준비의 시기이다.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치밀한 경쟁' 보여줘야

기자의 눈

나유라 금융부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이 이달 23일 금융권 최초로 채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신한은행 발표 직후 KB국민은행도 채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10월 말 예정인 채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채무구조도란 지배구조법 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채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하는 문서다.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지주

사와 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금융당국에 채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0월 31일까지 채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당초 당국이 예고한 시기보다 한 달 먼저 내부통제 채무구조도를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대부분의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채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권에 횡령, 배임, 부당대출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채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면 이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금융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상품을 빠르게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지가 핵심성과지표(KPI)의 기준이 됐다. 결국 금융사 일부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 판매에만 혈안이

된 탓에 고객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고객들이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사들의 경쟁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금융사 관점이 아닌 고객 관점으로, 판매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질적인 상품을 꾸준히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채무구조도 경쟁처럼 어떻게 하면 더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내부통제 문화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이는 곧 고객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라는 건강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금융사들이 목표로 하는 회사의 성장도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절박함과 전향적인 자세, 그것이 곧 K-금융을 세계에 알리는 길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에너지경제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 04516	발행인 송용희	시장 임정효	주필 신연수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정희택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 정치경제부 02-6749-3118	· 기획에너지부 02-6749-3140			
청양빌딩 5층	· 산업부 02-6749-3114	· 국제뉴스부 02-6749-3173			
대표전화 02-850-0114	· 금융부 02-6749-3172	· 전국부 02-6749-3119			
대표팩스 02-867-0453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종합편집부 02-6749-3127			
광고문의 02-6749-3124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구독문의 02-6749-3125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구독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 20,000원 1부 1,000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

**장애인신문**

---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 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입니다

---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Q LG의 클린테크에 바라는 게 있나요?

# 해녀덜 물질하는 바닷가 깨끗해시민 좋으께라

푸른 섬 제주의 해녀들은 바다가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LG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 탄소 저감 기술, 폐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 등 클린테크로 깨끗한 바다를 꿈꿉니다.



#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의 클린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g.co.kr의 2022-2023 ESG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